

한중 역사문제 평가 및 대응

-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공작(제2 '동북공정') 실태 및 대책 방안을 중심으로 -

정재남*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 주우한총영사(2015~18), 전 주몽골대사(2018~19), 전 고조선단군학회 부회장(2021~22),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역사언어학 전공)

1. 문제 제기 : 끝나지 않은 중국의 ‘동북공정’

1. 문제 제기: 끝나지 않은 중국의 ‘동북공정’
2.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공정 추진 현황
3.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추진 논리와 목적
4. 결어: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 한중간 역사문제는 2003~2004년에 진행된 ‘고구려사 귀속 문제’가 외교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표면화되었음. ‘고구려(사)’ 문제는 2003년 6월 2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 시론(試論) 「試論高句麗歷史研究的幾個問題」(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에서 “고구려 종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따라서 고구려사는 중국 역사의 양보가 불가한 부분”이라는 주장¹⁾으로 촉발되고 한국측의 거센 반발로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크게 부상되었음. 동 문제는 ‘동북공정’²⁾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본질이 ‘간도 영유권’과 관련된 ‘영토 문제’라는 것임을 2004. 8. 23. 우다웨이[武大衛] 당시 중국외교부 부부장 방한 계기 한중간 협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발언하여 밝혀졌음.³⁾

▷ 우리나라 국민에게 역사 정통성에 충격을 던진 ‘동북공정’은 학술도 학문도 아닌 정치적 책략으로 나타났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말했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당시 중국 상무위원 런지엔싱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역사문제의 장기 현안화가 부담스러웠던 한중 정부당국은 ‘구두 합의’ 7개항⁴⁾ 형식으로

1) 동 시론의 저자 필명인 ‘邊巖’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邊疆史地研究中心]가 발간하는 학술지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地然究)』 편집부 총책임자 리다룡李大龍으로 밝혀졌음.(서길수 외 4인 공저, 『동북공정백서』, 서울: 맑은나라, 2022, p.166~167.)

2)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약자로서 중국 동북3성[만주] 지역의 역사지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프로젝트임. 즉, 동북공정은 소위 ‘동북3성’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사의 현황에 관련하여 2002년 초부터 5개년 계획으로 요녕성을 중심으로 2007년 초까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격론을 겪으며 강력한 반발 속에서 추진되었고, 그 뒤 몇 년간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단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 역사의 학술적 연구와 한국사 왜곡 정책을 뜻함. 동북공정은 주로 고조선, 부여, 발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며, 가끔 백제와 신라를 포함하기도 함.

3) 김정배,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서울: 세창출판사, 2018, 285쪽.

4) 동 한중 정부간 ‘구두합의 7개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① 중국측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② 양국 정부는 또한 향후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 협력이 손상받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 나간다. ③ 한중 양국은 1992. 8월 한중수교 공동성명 및 2003. 7월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 ④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한중간 협력 관계의 큰 틀 아래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한다. ⑤ 양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⑥ 중국측은 한국측이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에 대한 기술에 대해 표시한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⑦ 양국정부는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 양측간 학술교류를 빠른 사일내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의와 이해 증진 그리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유리하도록 함. (서길수 외, 『동북공정백서』, 2022, p.291~292)

로 일단 문제의 확대를 막는 수준에서 임시 봉합하였음.

- 하지만 당초 비학술적인 동기 즉, 중국의 안보·영토 문제 차원에서 정부당국과 관방학계가 일체가 되어 추진된 '동북공정'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음. 한중 간의 잠재적인 '영토 문제' 관련, 중국은 한국측에 대해 '간도 영유권 포기' 약속을 요구하는데, 이는 장차 한국 주도 남북통일이 실현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미래 상황이기에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정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소위 '제1기 동북공정'을 현재도 사실상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⁵⁾
- 나아가 중국 정부당국은 관방학계를 앞세워,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한(韓)민족 최초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고조선에 대해서도, 고대 중국대륙에서 이주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인 집단'에 의해 건국된 '중국인 국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한대(漢代) 사전 『방언(方言)』에 수록된 '조선' 지역 어휘를 왜곡 인용하면서, 당시 고조선 주민이 사용한 언어도 고대 중국어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 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려는 소위 '제2의 동북공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추진하여 왔음.⁶⁾
- 중국 정부당국은 20년 전인 2004년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문제'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급히' 공식 게재하여 '한중 정부간 외교현안 문제화'를 초래하였던 '과오'를 교훈 삼아, '고조선사의 중국사 귀속 문제'는 관방학계를 앞세워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외교 현안화 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전술로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조선사 귀속 문제'가 중국의 의도대로 '성공'하게 되면 고조선 뒤를 이은 '고구려사 귀속 문제'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사 일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임.
- 동 '고조선사 귀속 문제'의 원인제공은 비록 중국 측이 하였지만, 보다 심각한 상황은 관련 대응을 하여야 하는 한국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학계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거 '고구려사 귀속 문제' 발생 때와 달리 중국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반응이 거의 없음.
- 이러한 한국측의 소극적인 입장은 중국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는 한국 정부당국(정부통제가 어려운 민감한 외교현안 문제화 기피 현상)과 학

당초 비학술적인 동기 즉, 중국의 안보·영토 문제 차원에서 정부당국과 관방학계가 일체가 되어 추진된 '동북공정'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음.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 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려는 소위 '제2의 동북공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추진하여 왔음.

5) 중국 정부당국은 '고구려사가 중국 소수민족 정권의 역사로서 중국사의 일부'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국측이 고구려사 기술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 사례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시정하는 행태를 반복 중임.

6) 고구려사에 이어 고조선사까지 중국사 일부로 귀속/편입시키려는 중국 관방학계 견해를 적극 반영한 중국측 단행본 역사연구서(苗威, 『古朝鮮研究』, 香港亞洲出版社)가 공식 출판된 것은 2006년임.

계의 자발적인 자기통제일 수도 있음. 아니면 ‘고구려사 귀속 문제’ 때처럼 중국에 맞서 동 역사 문제를 과감히 지적하고 언론·국민 내지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동 문제를 공론화하는 ‘퍼스크 펭귄(first penguin)’이 나타나지 않아 누구도 동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⁷⁾

- 중일간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사례처럼, 중국 정부당국은 일단 역사와 얽혀있는 영토 문제에 대해 일단 영유권/소유권을 주장하여 상대방과 대응한 협상 지위를 확보한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애국주의에 바탕을 두고 관방 언론 등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대대적으로 교육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 국제적 지위 등을 악용하여 기회가 오면 점차 협상력을 높여왔기에, 이러한 중국측 행태를 잘 아는 한국 측의 자신감 결여에 따른 소산일 수도 있음.

▷ 아니면 동 문제의 공론화보다는 비밀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치밀한 외교정책 일환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차라리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연간 사드 문제에 대한 소위 대중국 ‘3불1한 약속⁸⁾’ 사례 등을 볼 때 그런 개연성은 낮아 보임.

한중간 역사문제의 현재진행형이자 본질적으로 시한폭탄인 ‘고조선사 귀속 문제’의 현황 및 발생 배경과 동기 등을 역사적, 전략적 맥락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이 절실한 단계로 사료됨.

- 문제 자체를 모르는 것과 알면서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 또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으면 외교현안화는 유보될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가 소멸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님. 2022.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에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역에 대한 러시아측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도 포함되기에, 향후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측 개입의 역사적 명분과 한중간 역사(영유권) 갈등과 관련하여 이미 현재에 도래해 있는 ‘미래 문제’ 일 수도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간 역사문제의 현재진행형이자 본질적으로 시한폭탄인 ‘고조선사 귀속 문제’의 현황 및 발생 배경과 동기 등을 역사적,

7) 2003.8.16. 『신동아』, 2023.9월호에서 光明日報 시론 전문번역 공개, 2003.10.12. KBS <일요스페셜 : 한중 역사전쟁-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방영, 2003. 12.9.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의 공동 규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고구려사 귀속 문제’가 공론화 및 외교현안 문제화를 주도하였음.

8) 사드 문제 관련 ‘3불1한’은 2017.10.31.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과 협의해 공표한 내용에 기초함. 당시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3불’이 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②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③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겠다고 ‘1한’은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로서 한국측이 사드 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가를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임. (중앙일보, 2022. 8. 15, 자 <사드 ‘3불’과 ‘3불1한’>)

전략적 맥락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이 절실한 단계로 사료됨.

2.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공정 추진 현황

1) 중국 관방학계 주장 요지

■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는 고조선 관련 연구는 순수 학술 차원을 넘어 현대 판 '중화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소위 '동북공정' 프로젝트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 즉 2003년 노정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봉합된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이어 '고조선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정치적 주장이 전제된 비학술적인 국가 프로젝트 수행의 일환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중국의 학술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중국에서 출판된 고조선 관련 최초의 종합연구서로 평가되는 『고조선연구(古朝鮮研究)』(香港亞洲出版社, 2006) 서론에서 중국인 연구자 마오웨이[苗威]는 고조선의 정체성이 기자(箕子)와 위만(衛滿)이 이끄는 중국인 이주 집단이 건립한 고대국가라고 밝힘으로써 역사연구에서 정치적 요소인 '귀속 문제'를 언급함.

▷ 이는 2003년 촉발되었다가 한중 정부당국 사이의 잠정 합의로 일시 봉합된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이어, '고조선의 역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정치적 주장이 전제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임. 마오웨이의 『고조선연구』가 출판된 지역이 중국 '대륙'이 아닌 '홍콩' 지역에서 출판한 것도 의미가 가볍지 않음.

▷ 2023. 7월 현재도 중국 '대륙'에서 동 『고조선연구』라는 책은 인터넷 베이스로 주문 및 판매가 되지 않음. 대신 같은 저자의 이름으로 『기씨조선사(箕氏朝鮮史)』 및 『위씨조선사(衛氏朝鮮史)』라는 이름으로 분책되어 중국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되었음. 이는 고조선이란 나라가 중국인 이주 집단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해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인 연구자의 이러한 주장은 고조선을 한(韓)민족의 역사로 인정해 온 중국 학계의 기존 입장과 상반됨.

▷ 둘째, 또 다른 중국인 연구자 티엔즈푸[田子馥]는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된 그의 저서 『중국동북한문화사술(中國東北漢文化史述)』(2015: 55~58)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은 고대부터 한족(漢族)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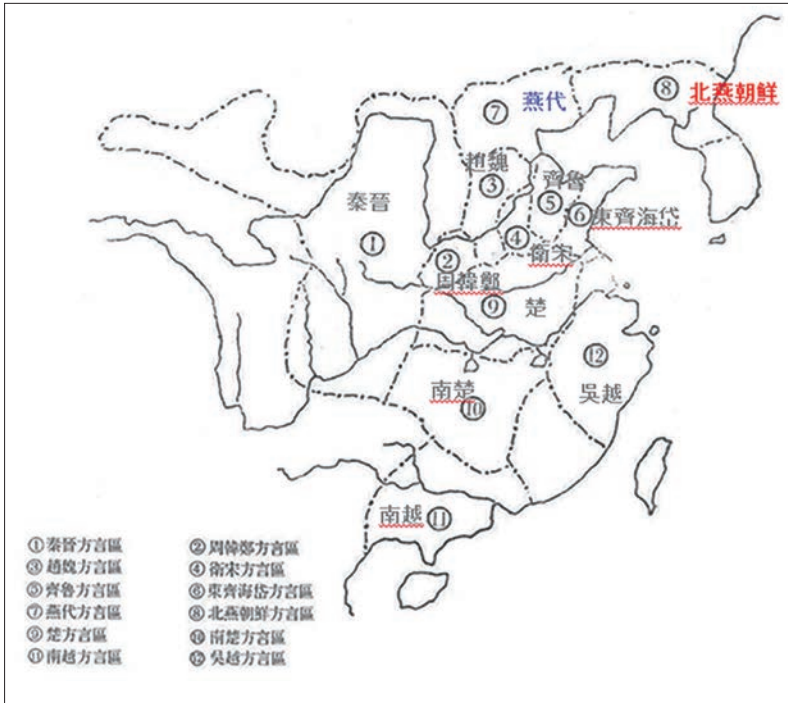
배해왔음을 주장”하면서 그 주요 근거의 하나로 고조선 주민들이 상고 중국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양웅(揚雄: BC 53~AD 18)이 전한(前漢) 말기인 AD 1세기 초에 편찬한 ‘지역어휘 사전’인 『방언(方言)』 내용을 바탕으로 “동북지역 및 한반도는 원래 중국인들이 살던 곳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였음이 양웅의 『방언』 중 ‘북연·조선 방언구(北燕·朝鮮 方言區)’ 설정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음.⁹⁾

- ▷ 셋째, 중국 역사언어학자 리수하오[李恕豪]는 그의 저서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양웅 《방언》과 방언지리학 연구: 2003)¹⁰⁾에서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언어의 연원 및 성격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방언』내 고조선지역(북연 및 조선지역) 어휘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고 중국어권인 연(燕)지역 사이에 공통어휘가 매우 드문 것에 대해 『방언』내에서 합리적 논증이 어렵게 되자, “양웅의 역량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북연지역 어휘를 유실하고 『방언』에 제대로 수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무리한 단정을 하였음. 북연-조선지역 어휘와 상고 중국어권인 중원지역 어휘 사이에 공통어휘가 없거나 매우 드문 이유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학술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주장까지 제시하였음.
- ▷ “조선은 본래 상(商=殷)민족의 발원지이다. 진징팡[金景芳] 역시 상(商)민족이 우리나라[중국] 북방 즉, 『방언』 상의 북연(北燕)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략) 또한 서주(西周) 초기에 기자(箕子)가 조선에 건국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내지(內地)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북연-조선 방언은 한편으로 상(商) 시대 은(殷)의 수도 부근 언어와 서로 가까웠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조선]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민족의 언어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가운데 북연-조선 지역 방언과 “은족 언어[殷語]”의 후예인 위(衛)지역 방언과의 사이에 (공통어휘가) 전혀 수록되지 않았으며, 송(宋)지역 어휘와도 겨우 1차례 (공통어휘가) 수록되었을 뿐이다. 이는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주(周) 초기부터 전한(前漢) 말기까지 이미 1천 년이란 오래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 ▷ 즉, 현대중국 역사언어학계를 대표하는 동 연구자는 상고시기 중원지역에 존재하였던 은(殷)의 발원지를 『방언』 상의 조선 및 북연 지역이라고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전제로 하고, 이어 학

9) 田子馥, 『中國東北漢文化史述』,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55~58쪽

10)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巴蜀書社, 2003, 163쪽.

술적으로 실체가 증명되지 않은 '기자조선 동래(箕子朝鮮 東來)' 설을 두 번째 전제로 내세웠음. 그러한 여러 전제가 모두 성립된다는 가정 위에서 『방언』의 '조선'과 '북연' 지역의 어휘가 상고 중국어라고 주장하고 있음.¹¹⁾



지도. 『방언』에 나타난 전한시대의 「방언구획도」¹²⁾

▷ 한편, 동 연구자는 『방언』에 수록된 '북연·조선 방언구' 어휘와 중원 일대 어휘 사이에 공통어휘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은(殷) 멸망 이후 1천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추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아울러 동 연구자는 연(燕)방언이 장기간에 걸쳐 '북연' 및 '조선' 지역으로 확장, 침투되었으며, 그 결과 『방언』에 수록된 조선지역 어휘는 연(燕)·제(齊) 일대의 중국어 방언과 장기간에 걸친 접촉에 의해 형성된 중국어 방언의 한 종류로서 당시 토착민의 언어와는 다르다¹³⁾고 추정을 하고 나서 그 전제 위에 또 다른 추정을 거듭하는 주장을 하였음.

11)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巴蜀書社, 2003, 164~165쪽.

12)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巴蜀書社, 2002, 40쪽, “圖一: 西漢方言區劃圖”

13)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巴蜀書社, 2002, 162~165쪽.

학술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중국인 연구자의 고조선사 관련 주장을 '학술'이라는 형식으로 뒷받침해주는 중국 학계의 『방언』 연구는 중국 정부당국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학술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중국인 연구자의 고조선사 관련 주장¹⁴⁾을 '학술'이라는 형식으로 뒷받침해주는 중국 학계의 『방언』 연구는 중국 정부당국 차원의 지원¹⁵⁾을 받으며 현재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¹⁶⁾

2) 중국 정부당국 동향

■ '고조선사 귀속문제' 관련, 중국 관방학계가 과감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태도와는 달리, 중국 정부당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고구려사 귀속 문제'시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한중 외교갈등을 직접 촉발하였던 경험이 참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고구려사 귀속문제'는 2004년 당시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 고구려사 관련 중국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을 계기로 한중 간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 현재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내 국가소개 코너의 '한국(韓國)' 및 '조선(朝鮮)' 항목에서 한민족의 역사 기술은 1910년 일제식민지 시기부터 시작하고 그 이전의 한(韓)민족 역사와 한중관계사를 모두 수록하지 않음으로

14) 중국인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한국인 연구자의 최근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음. 이연주, 『揚雄 『방언』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中國語文學』 54, 中國語文學硏究會, 2009.; 이연주, 『양웅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지역 어휘와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정재남, 『揚雄의 『方言』에 수록된 北燕지역 어휘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47,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정재남, 『揚雄 《方言》에 수록된 漢代 東北지역 어휘 研究 : 朝鮮·北燕·燕·代지역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재남,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 『方言』에 수록된 朝鮮·北燕지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고조선단군학』 44, 고조선단군학회, 2021.; 정재남, 『漢代 『方言』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어휘의 언어 정체성 분석: 중국의 고대 대표字書에 수록된 同一漢字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45, 고조선단군학회, 2021.; 정재남, 『漢代 『方言』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방언어휘 『匣』의 연원 및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7, 고조선단군학회, 2022.; 정재남·한용수, 『漢代 『方言』의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정재남, 『漢代 『方言』에 수록된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轉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69,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 정재남, 『漢代 『方言』의 北燕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50, 고조선단군학회, 2023.; 정재남, 『漢代 『方言』의 朝鮮·北燕지역 記音字 어휘 분석』, 『중국언어연구』 107, 한국중국언어학회, 2023. 등이 있음.

15) 대표 저작물은 華學誠 主編, 『《方言》與兩漢語言研究叢書』(教育部哲學社會科學研究後期資助重大項目, 高等學校優秀博士學位論文作者專項基金項目,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1) 등이임.

16) 정재남, 『고조선지역 언어 분석에 관한 새로운 성과와 절반의 '아쉬움' : -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_양웅의 『방언』 수록 고조선어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8 -, 『고조선단군학』 45, 고조선단군학회, 2021, p.251,

써¹⁷⁾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하지만 중국정부 홈페이지에서 고조선 관련 내용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당국이 고조선이 한(韓)민족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중국정부당국 입장이 반영된, 중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검색엔진 중 하나이자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의 '고조선(古朝鮮)' 항목 설명임.

▷ 먼저 동 <바이두 백과사전>의 '고조선(古朝鮮)'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⁸⁾

“古朝鮮是对在汉武帝设置汉四郡(公元前108年)以前,古代位于今朝鲜半岛北部的早期国家的称谓,主要指中国历史上记载的箕子朝鲜、卫满朝鲜两个前后相接的诸侯国,藩属国。”

(고조선은 한 무제가 한사군(기원전 108년)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금의 조선반도 북부에 있었던 초기국가에 대한 호칭으로 주로 중국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앞뒤로 연결된 제후국이자 번속국을 지칭한다)

▷ 위의 설명에 고조선의 '주요 민족'을 "화하(华夏) 및 "부여(扶余)"라고 기술하였음. '화하(華夏)'는 중국 한족(漢族)의 또 다른 명칭이고, '부여(扶余)'는 이미 중국 관방학계에서 고구려와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 및 러시아, 일본 학계 등에서 고조선의 주요 종족으로 보는 '예맥(濊貊)'이라는 명칭은 동 항목 설명에서 전혀 보이지 않음.

▷ 이어 <바이두 백과사전>은 “对古朝鮮这一概念,其他国家的学者与朝鲜、韩国学者的理解有所不同.”(고조선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른 나라

17) 韓國：“【簡 况】1910年至1945年,朝鮮半島沦为日本殖民地。1945年8月日本投降,美苏军队分别进驻半島南北部。1948年8月15日半島南半部建立大韓民國,李承晚出任首屆總統。1960年李承晚下台,同年8月尹潽善任總統。1961年朴正熙發動軍事政變,此後長期執政。1979年朴正熙遇刺身亡,崔圭夏任總統,同年全斗煥發動政變,于1980年出任總統。1987年韓國修改憲法,實行總統直選,同年盧泰愚當選第13屆總統。此後金泳三、金大中、盧武鉉、李明博、朴槿惠、文在寅和尹錫悅先後當選第14屆至20屆總統。”(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524/1206x0_676526/)

朝鮮：“【簡 况】1910年至1945年,朝鮮半島沦为日本殖民地。1945年8月日本投降,苏美军队分别进驻半島北南部。1948年9月9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宣告成立。金日成長期擔任朝鮮最高領導人。1994年金日成逝世後,金正日接班擔任朝鮮最高領導人。2011年12月金正日逝世後,金正恩接班擔任朝鮮最高領導人。”(https://www.mfa.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1206x0_676406/)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韓國國家概況> 항목 검색(검색일 : 2023. 7. 26.)

18) <百度百科> '古朝鮮' 항목 설명 (검색일: 2023. 7. 26) https://baike.baidu.com/item/%E5%8F%A4%E6%9C%9D%E9%B2%9C/10658976?fr=ge_ala

학자들은 북한 및 한국 학자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단군(檀君)조선에 대해서는 ‘신화’로 간주하여 믿을 수 없는 역사로 돌리고,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기자(箕子)조선 및 위만(衛滿)조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역사로 설명함. 동 설명에서 ‘다른 나라 학자들’은 중국 관방학계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즉, 중국 관방학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바이두 백과사전〉은 고조선의 역사를 ‘화하(華夏)’족이 주체가 되는 중국의 ‘제후국’이자 ‘번속국’으로서 중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古朝鮮是在汉武帝设置汉四郡(公元前108年)以前, 古代位于今朝鲜半岛北部的早期国家的称谓, 主要指中国历史上记载的箕子朝鲜、卫满朝鲜两个前后相接的诸侯国, 濊貊国。

中文名	古朝鮮	政治体制	君主制
简称	朝鮮	主要民族	华夏, 扶余
		出现时间	前1122年

〈바이두 백과사전〉의 ‘고조선’ 항목 설명페이지 캡처화면_검색일: 2023.07.26.

3) 한국측 대응 동향

- 한국 역사학계는 소위 ‘고조선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 관방학계의 주장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음.¹⁹⁾ 하지만 한국 역사학계는 2003~4년 ‘고구려사 귀속 문제’ 때와는 달리 ‘고조선사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단체 연합성명서 발표 등 직접적인 대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 과거 ‘고구려사 귀속 문제’ 발생을 계기로 출범한 역사문제 전문 대응 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구 ‘고구려연구재단’)은 최근까지 중국 관방학계가 고조선사 왜곡을 시도하는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동북아역사재단은 2020년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라는 단행본 책자를 기획 출간하면서 그 첫머리에 실린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와 그 문제점’이라는 논문²⁰⁾에서 중국학계의 고조선사 연구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러한 중국학계의 주장이 “대부분 자의적 사료 해석과 비학문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처럼 “이웃한

19) 조법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검토: 동북공정 전후 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 이동훈, 「중국 동북공정의 연구현황과 분석: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동향과 문제점」, 『사총』 66, 고대사학회, 2008; 이종훈, 정재남 번역, 「최근 20년간 중외학계의 고조선에 대한 연구와 과제」, 『동아시아고대학』 43, 동아시아고대학, 2016.; 조법중,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선사와 고대』 54, 한국고대학회, 2017, 등이 있음.

20)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와 그 문제점」,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20, p.28~49.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은 '중화민족대가정(中華民族大家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중국이 직면한 정치적 현상을 극복해 보려는 비학문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논문을 통한 비판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과거 '고구려사 귀속문제'에 대한 학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계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간학술단체 '고구리·고리연구소'²¹⁾는 『한중수교 30년 역사침탈 20년 동북공정 백서』를 간행하면서 2022년 3월 1일 3.1절을 계기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조선사 왜곡을 포함한 중국측의 “역사침탈”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국내 주요언론 등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음.
- 입법부인 국회는 과거 '고구려사 귀속문제' 대응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외교 등을 통해 대중국 압박 등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동 '고조선사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주목되는 대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 외부 관찰의 한계는 있지만, 외교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행정부 역시 '고조선 귀속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대응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소위 중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여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중국측의 '고조선사 귀속' 시도가 이미 수십 년 이상 경과하였고 여전히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용한 외교'의 실질적인 효과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실효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로 볼 수 있음.
-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학계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협력하여 '고조선사 귀속문제' 해결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어 주변국과의 역사문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학술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추진 논리와 목적

1) 추진 논리 : 중국의 유사 성공사례 분석_중월 간 '남월국(南越國) 귀속 문제'

- 중국은 과거 베트남과의 역사문제였던 '남월국의 중국사 귀속'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중국의 전한 왕조시기에 고조선과 동시에 존재하였던 오늘날 중국 남부 및 베트남 북부지역의 남월국에 대하여, 베트남민족 최초의 역

중국은 과거 베트남과의 역사문제였던 '남월국의 중국사 귀속'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21) '고구려' 및 '고려'를 역사음운학적 연구를 통해 그 소리값을 '고구리' 및 '고리'로 복원하여 동 단체의 명칭으로 삼았다.(고구리·고리연구소 엮음, 『한중수교 30년 역사침탈 20년 동북공정 백서』, 2022, p.15.

사서 『대월사기(大越史記)』²²⁾에는 베트남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기술되었으며, 이후 20세기 초까지 베트남민족은 남월국사를 베트남사로 인식하였음. 그러나 1950년대 베트남전쟁 초기에 당시 중국 정부당국은 베트남지원 대가로 북월 정권에 대하여 ‘영토문제’(西沙群島 Paracel Islands 영유권)²³⁾와 ‘역사 문제’(남월국사의 중국사 귀속)²⁴⁾의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됨.



〈사진〉 중국 광저우 소재 ‘서한남월왕박물관(西漢南越王博物館)’ 입구 간판 사진

- 중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베트남(당시 북월 정권)은 내부 격론 끝에 ‘남월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음. 즉, 중국인 출신 변경수비대장 조타(趙佗)가 군사쿠테타를 통해 토착 베트남 민족세력과 연합정권인 ‘남월국’을 세워 왕위에 오르고 그 후대에 중국 중원지역에 기반한 전한(前

22) 베트남의 『대월사기(大越史記)』는 1272년 저술된 베트남 고대사를 다룬 관찬 역사서이다. 베트남 전 왕조(陳朝)의 학자 레 반 흐우(黎文休)가 편찬하였다.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 권수는 30권이다. 기원전 207년경 재위에 오른 베트남의 초대 군주인 남월의 쩌에우 다(南越武帝)부터 베트남 리 왕조(李朝)의 소황제(昭皇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대월사기는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으나, 『월사략(越史略)』,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 등, 다른 베트남 역사서에 인용되거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5세기에 성립한 베트남의 현전(現傳) 최고(最古) 최대 고대역사서인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는 『대월사기』를 바탕으로, 증가 보충된 내용이다

23) 1950년대 후반 당시 북베트남은 서사군도(西沙群島) 영유권이 중국에 있음을 인정하는 베트남 총리 명의 각서를 중국에 전달하였음. (1958年当时越南总理范文同发给中国周恩来总理的一份文件, 在这份文件里越南承认和赞成中华人民共和国政府1958年9月4日所作的关于中国领海的决定和声明, 这其中就包括西沙和南沙属于中国的领土.< 搜狐> 2023. 6.12.자 ‘北越政府承认中国西沙群岛的主权, 却在越南统一后又出尔反尔’ https://www.sohu.com/a/684675834_121161082)

24) 유사 사례로서 2004년 한중간 ‘고구려사 귀속문제’ 발생 당시 북한은 중국측 입장에 대해 견제 내지 대응하는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음. 이는 주체와 자주를 평소 강조하던 북한의 태도와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서 역사문제에 관한 중국-북한 사이 묵계 존재를 추측할 수도 있음.

漢) 정권과 투쟁하였던 역사에 대한 해석에서 남월국 건국시조 조타(趙佗)를 '중국인 침략자'로 재규정하고 그때부터 중국의 베트남 민족 침략이 시작된 것으로 기본 인식을 전환하였음. 이에 중국은 남월국사를 '西漢南越國史'(전한 왕조에 속한 남월국 역사)로 새롭게 규정하여 중국사에 최종 귀속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공식적으로 남월국 귀속 관련 역사분쟁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 기술된 남월국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임.(아래 <표> 참조) 즉, 중국인 출신 건국주와 건국 추진방식, 국가운영 형태, 멸망 과정(전쟁) 및 결과(한군 현 설치)를 통한 식민통치) 등이 매우 유사함. 다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중국과 관련 민족 사이에 역사 귀속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임.²⁵⁾
-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다툼이 있는 고대국가 역사의 귀속 문제를 두고 베트남으로부터 남월국 역사가 중국사에 속한다고 '인정'받았고, 한국은 고조선 역사가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남월국 귀속 문제'와 '고조선 귀속 문제'의 본질은 같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큼. 즉, 중국은 중국역사에서 남월국과 유사한 '역사적 위상'을 가진 고조선에 대해 '남월국사의 귀속 문제' 성공 사례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중국은 중국역사에서 남월국과 유사한 '역사적 위상'을 가진 고조선에 대해 '남월국사의 귀속 문제' 성공 사례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중국 입장(『사기』)에 나타난 남월국 및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 비교표

분류	남월국	고조선
왕조 건국주	조타(趙佗) ("南越武王")	위만(衛滿) (조선왕)
건국주 출신	"중국인(中國人)"(『史記』)	"연인(燕人)"(『史記』)
건국 형태(연도)	중국출신 장군의 군사쿠테타 (BC 203)	중국출신 장군의 군사쿠테타 (BC 194(?))
국가운영 형태	중국제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연합정권 ("和輯百越" 화합정책)	중국제 이주세력과 토착세력의 연합정권 ("朝鮮相" 등 존재)
통치 영역	현 중국영토(廣東, 廣西, 福建, 湖南, 貴州, 雲南 등) 및 현 베트남 북부	현 중국영토(吉林, 遼寧 등) 및 한반도 서북부
멸망 과정 (병합 연도)	전한(前漢)과의 전쟁 (BC 111년)	전한(前漢)과의 전쟁 (BC 108년)
멸망후 상황	한구군(漢九郡) 설치	한사군(漢四郡) 설치
과거의 인식	베트남민족 최초 고대국가	한(韓)민족 최초 고대국가
현재의 인식	중국역사 일부(중국족) vs 중국의 베트남 침략사(월족)	중국역사 일부(중국 관방학계) vs 한민족 최초국가 (남북한)

25) 戴可來, 「略論古代中國和越南之間的宗藩關係」,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2,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중심, 2004, p.115; 陶維英, 『越南古代史』, 北京: 科學出版社, 1959, p.166~168.(김한규, 「베트남과 중국의 중월관계사 논쟁」, 『동아시아 역사 논쟁』, 서울: 소나무, 2015, p.138~139.에서 재인용)

2) '고조선사 귀속' 추진 목적

■ 중국이 1980년대까지 한국사 일부로 공인하였던 고조선사를 돌연히 중국사로 편입[귀속]시키려는 목적은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고구려사 귀속 문제'의 완성임. 당시 한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여론의 반중감정 악화 등에 힘입어 2004년 한중 정부간 구두양해 형식으로 임시 봉합한 '고구려사 귀속 문제'는 여전히 지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최근까지도 중국 정부당국은 '고구려사가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기본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각종 관방 출판물과 관방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중국측 입장의 기술을 하였을 때 한국측이 2004년 한중간 '구두양해' 사항을 근거로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에만 국한하여 마치못해 관련 표현을 고치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공산당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역사 인식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음. '고구려사 귀속 문제'는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되는 현안이며 '고조선사 귀속 문제' 역시 '고구려사 귀속 문제'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음.

▷ 한편, '고구려사 귀속 문제'의 본질은 2004년 한중 정부간 협상에서 중국측 협상 최고 책임자인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부부장이 직접 밝힌 대로 '영토 문제'로 보임.²⁶⁾ 따라서 '고조선사 귀속 문제'의 본질 역시 '영토 문제'로 볼 수 있음.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한반도 통일상황에 대비하여 한중간 영토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음.

■ 둘째, 향후 북한 체제의 붕괴 등 '한반도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투사 내지 확대를 위한 역사적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은 이미 7세기 초에 수(隋) 및 당(唐) 왕조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그 침공의 이유로서 BC 108년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한 한군현(漢郡縣)의 옛 연고지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역사적 명분을 내세웠음.²⁷⁾

26) 본고 각주 3) 참조

27) 서기 610년 고구려 원정을 망설이는 수 양제(楊帝)에 대해 신하인 황문시랑 배구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음. "고구려는 본래 기자(箕子)가 책봉을 받은 곳으로 한(漢)·진(晉) 시대에 모두 중국 군현(郡縣)으로 있던 것인데. 지금 복속하지 않고 따로 이역(異域)이 되었으니 선제(先帝: 수 문제)가 이를 치려고 한 지 오래입니다. 폐하의 시대가 되어 어찌 멸망시키지 않으므로써 예의 바른 지역을 오랑캐의 고을로 만들겠는가." 황제가 그 말을 따라 (하락) (『資治通鑑』, 권181 『隋紀』 <隋煬帝: 上之下>; 정호섭 외 10인, 『한국 고대사 관련 동아시아 사료의 연대기적 집성: 上』, 서울: 주류성, 2018, p.695.) 또한 서기 645년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의 명분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요동은 본래 중국의 땅인데 수가 네 번 군사를 내었으나 얻을 수 없었다. 짐이 지금 동쪽을 정벌하는 것은 중국을 위하여 자제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고, 고구려를 위하여 君父의 치욕을 씻으려는 것 뿐이다." (『資治通鑑』, 권197 『唐紀』 13 <太宗: 中之下>; 정호섭 외 10인, 『한국 고대사 관련 동아시아 사료의 연대기적 집성: 中』, 서울: 주류성, 2018, p.52.)

▷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 4. 6.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라고 라 정상회담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입장을 표명²⁸⁾한 것도 단순히 자기 과시적인 역사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 급변사태시 한반도 문제 개입을 위한 역사적 명분 축적으로 볼 수 있음. '고조선사 귀속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2014년) 및 우크라이나와의 전면 침공전쟁(2022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측의 역사 해석 차이가 있었음²⁹⁾을 비추어 볼 때, '고조선사 귀속 문제'를 추진하는 결과로서 중국이 한반도(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에 러시아처럼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소위 홍산(紅山)문화 내지 요하(遼河)문명을 둘러싼 동아시아 최고(最古)문명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개연성도 추정 가능함. 홍산 문화는 BC 4000~BC 3000년경 지금의 요녕성 서부에 위치하였던 신석기시대 문화를 가리키는 말임. 일부 연구에 의하면 홍산문화 연도는 BC 4700~BC 2900년경까지로 서술되고 있음. 중국에서는 홍산문화 전기(前期)인 요녕성 북부 지역인 남만주 지역에 있던 신락(新樂)문화(BC 8000년)부터 홍산문화(BC 4000년)를 지나 하가점(夏家店)문화(BC

28) 2017. 4. 6. 미국 마라고라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4. 12.자 트럼프 대통령은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함.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Not North Korea, Korea. And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years.....and many wars.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nd after listening for 10 minutes, I realized that it's not so easy."(그러자 그-시진핑-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로 들어감. 북한이 아니라 코리아 전체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은 그러니까, 수 천년.....그리고 수많은 전쟁,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것에 관해 말했어요. 10분 동안 듣고 난 뒤 나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 President Trump,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2, 2017 -

2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 관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국가라고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1천여년의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인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종족이라고 주장함. 두 나라의 분쟁은 여기서 시작됨. 러시아는 자신을 대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 벨라루스를 백(白)러시아로 부르며, 세 나라가 러시아 민족의 3형제라고 부름. 1939년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하며 얻은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붙여주었으며, 1940년엔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를 우크라이나에 합쳤음. 이런 것들이 형제국가였기에 가능했다고 푸틴은 주장함.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르 체제 이전부터 한뿌리에서 뿔어나간 자연스런 관계"라며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하길 거부하였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형제국가로 동슬라브족이라는 한 민족임을 강황하게 설명했음. 푸틴의 대러시아주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충돌하고 있음. (출처; <아틀라스뉴스> 2022. 2. 11.자 <우크라이나 역사-러시아의 영토인가>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7>

1500년)까지의 문화를 통틀어 ‘요하문명(遼河文明)’이라고 지칭함.

- 문제는 중국 황하문명보다 최소 1천 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홍산문화/요하문명의 고고학적 특징 가운데 지식묘, 곰송배 신앙 등 상당수가 고조선계 문화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반면, 황하 유역의 한족(漢族) 조상인 화하(華夏)족 문화와는 거리가 났.
- 홍산문화를 중국 역사학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학술적인 주요 이유는 고조선과의 연관성 때문으로 여겨짐. 특히 홍산문화가 곰을 신성시 여기고 여신 조각상이 출토되는 등의 특징이 단군설화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많음. 고조선은 홍산문화를 포함해 신락(新樂) 하층(下層)문화~소하연 문화(BC 3000~2000)보다는 그 이후의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문화(BC 2000~1500), 하가점 상층문화(BC 1500~1000)와 오히려 관련이 더 높다는 학술적 견해도 대두되었음. 즉, 하가점 하층 문화에 속하는 내몽고 적봉(赤峯)시 유적인 삼좌점(三座店) 석성(石城)은 그 형식이 고구려의 축성 형식과 매우 유사하며, 하가점 상층 문화 지역에서는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는 비파형 동검이 다수(한국 내 소장량보다도 훨씬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세계 문명사를 새로 고쳐 써야 할 정도인 홍산문화/요하문명 유적유물 발굴 사업은 1980년대부터 중국학계가 독점하여 본격화하였으며, 동 과정 및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지만, 고조선 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기존 인식과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만약 홍산문화/요하문명이 고조선과 연결되면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화하(華夏)족이 아닌 예맥족으로 인정될 경우 한민족의 역사적 활동강역은 한반도 중북부와 요동(遼東) 일대를 넘어 요하 건너 요서(遼西) 지역까지 확장되기 때문임.
-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당국과 관방학계는 고조선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간주해온 지난 수천년 간에 걸친 자신들의 전통적인 인식을 돌연히 바꾸면서, 학술적으로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방언』의 내용을 근거로 고조선의 첫 번째 주요 민족이 중국인인 화하(華夏)족이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고대중국어이었다고 강변하면서 고조선사가 중국사에 속한다고 비학술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로 보임.

4. 결어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고조선사 귀속 문제'는 중국 관방학계의 일부 연구자가 주장하는 차원의 단순한 학술적 견해가 아님. 양식이 있는 학자라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이는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천명한 중국 당정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연결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04년 표면화된 '고구려사 귀속 문제'가 한중 정부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동 역사문제가 중국 당정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국가방침이기 때문일 것임. '고조선사 귀속 문제'도 같은 맥락과 배경을 가진 중국 국가방침의 일환으로 보임. 즉 '고구려사 귀속 문제'가 제1기 '동북공정'이었다면 '고조선사 귀속 문제'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하게 추진되는 제2기 '동북공정'으로 보임.
- 따라서 '고조선사 귀속 문제' 역시 '고구려사 귀속 문제'처럼 장기화할 것이며,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측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외교 카드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됨.
-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동의할 경우, 동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 첫째, '고조선사 귀속 문제'는 '고구려사 귀속 문제'와 같이 본질적으로 한중간 '영토 문제'와 직접 연계가 되며, 중국 당정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국가방침인 점이 상수(常數)가 되어 쉽게 변화하지 않은 것임.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정세/국제정세 등 여러 변수(變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국측의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에 앞으로 한중 양국간 장기 현안 과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둘째, 동 문제에 대한 북한측과의 공조와 협력은 이미 '고구려사 귀속 문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임. 주체성과 자주성을 평소 강조하던 북한 체제는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표한 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임.
 - ▷ 셋째, 대중국 관계는 국민여론을 움직여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에, 학계와 언론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제적 대처를

따라서 '고조선사 귀속 문제' 역시 '고구려사 귀속 문제'처럼 장기화할 것이며,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측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외교 카드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됨.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구려사 귀속 문제’ 발생 당시 한국 역사학계의 공동성명 발표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일으켜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 카드화에 성공하였던 사례는 좋은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음.

▷ 넷째, 만시지탄이지만 한국 정부(외교부 및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은 문제 심각성을 직시하여 정(政)·관(官)·학(學)이 참여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섯째, 동 ‘고조선사 귀속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있어 중국측이 가장 중시하지만 또한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대(漢代) 언어자료 『방언』에 관한 연구분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고조선사 귀속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는 기자동래설의 연원인 선진(先秦)문헌 『서경(書經)』, 기자동래설 및 위만조선 흥망에 관한 역사기록인 『사기(史記)』 그리고 고조선지역 어휘를 대거 수록한 『방언』 등 꼽을 수 있는데, 『서경』과 『사기』 등 역사기록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도 많고 연구밀도 역시 높지만, 중국측이 고조선이 중국인이 건국한 나라로서 중국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언』에 관한 한국측의 연구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단행본)

- 『書經』, 『史記』, 『資治通鑑』
 揚雄 著, 郭璞 注, 周祖謨 校箋, 『方言校箋』, 北京: 中華書局, 1993.
 정호섭 외 10인, 『한국 고대사 관련 동아시아 사료의 연대기적 집성』, 전3권, 서울: 주류성, 2018.
 김정배,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서울: 세창출판사, 2018.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역주 고조선사료집성』 전2권, 서울: 새문사, 2019.
 동북아역사재단북방사연구소 편,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서길수 외 4인 공저, 『동북공정백서』, 서울: 맑은나라, 2022.
 陶維英, 『越南古代史』, 北京: 科學出版社, 1959.
 苗 威, 『箕氏朝鮮詞』,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苗 威, 『衛氏朝鮮詞』,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3.
 田子馥, 『中國東北漢文化史述』,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학술논문)

- 김한규, 「베트남과 중국의 중월관계사 논쟁」, 『동아시아 역사 논쟁』, 서울: 소나무, 2015.
 이동훈, 「중국 동북공정의 연구현황과 분석;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동향과 문제점」, 『사총』 66, 고대사학회, 2008.
 이연주, 「揚雄『방언』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中國語文學』 54, 中國語文學研究會. 2009.
 이연주, 「양웅『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지역 어휘와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이종훈, 정재남 번역, 「최근 20년간 中外學界의 고조선에 대한 연구와 과제」, 『동아시아고대학』 43, 동아시아고대학, 2016.
 정재남, 「揚雄의『方言』에 수록된 北燕지역 어휘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47,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정재남, 「漢代『方言』내 東北지역 어휘의 언어적 연원 및 정체성 탐구 試論: 『方言』에 수록된 東北지역 어휘와 『爾雅』 同一漢字 어휘의 비교분석」, 『동아시아고대학』 5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정재남, 「漢代『方言』내 東北지역 어휘의 언어적 연원 및 시대적 傳承 분석 試論: 『廣雅』에 수록된 漢代『方言』의 東北지역 同一漢字 어휘 비교분석」,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 정재남, 「揚雄《方言》에 수록된 漢代 東北지역 어휘 研究 : 朝鮮·北燕·燕·代지역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재남·이도하·변지원, 「중국 漢代 방언사전『方言』에 수록된 北燕지역 어휘와 고대 몽골어의 친연관계 고찰 試論」, 『몽골학』 57, 한국몽골학회, 2019.
- 정재남,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方言』에 수록된 朝鮮·北燕지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고조선단군학』 44, 고조선단군학회, 2021.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어휘의 언어 정체성 분석: 중국의 고대 대표字書에 수록된 同一漢字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45, 고조선단군학회, 2021.
- 정재남, 「고조선지역 언어 분석에 관한 새로운 성과와 절반의 ‘아쉬움’ : -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_양웅의 『방언』 수록 고조선어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8 -, 『고조선단군학』 45, 고조선단군학회, 2021.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방언어휘 ‘𠵼’의 연원 및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7, 고조선단군학회, 2022.
- 정재남·한용수, 「漢代『方言』의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2022.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轉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69,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
- 정재남, 「漢代『方言』의 北燕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50, 고조선단군학회, 2023.
- 정재남, 「漢代『方言』의 朝鮮·北燕지역 記音字 어휘 분석」, 『중국언어연구』 107, 한국중국언어학회, 2023.
- 정재남, 「漢代『方言』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同訓異表記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71,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
- 조법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검토: 동북공정 전후시기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 조법중,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先史와 古代』 54, 한국고대학회, 2017.
- 戴可來, 「略論古代中國和越南之間的宗藩關係」,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2,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 2004.

(인터넷 사이트)

-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fa.gov.cn/>)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搜狐> (<https://www.sohu.com/>) 등

❖ 저자 약력

■ 정재남

정재남 전 대사는 현재 동국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989년 외무고시를 통해 외무부 입부 이후 33년간 외교부 본부 중국과장, 기획재정관 그리고 주중국대사관 정부과장,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우한 총영사 및 주몽골 대사 등을 역임하고 정년 퇴임하였다.

몽골인문대 박사과정(역사언어학 전공)에 이어 동국대 박사과정(중국어학 전공) 재학 중이다. 단행본(단독) 저서로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1995, 역서), 『중국 소수민족 연구』(2007), 『중일 영토전쟁: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의 역사적 경위와 핵심 쟁점』(2016) 및 『백제 최후의 여전사 계산공주』(2022) 등 6권을 출간하고, KCI 등재지 학술논문으로 「만주어 언어교체(소멸)의 역사적 과정 및 원인 분석 시론」(2018),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2022) 및 「漢代『方言』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同訓異表記語 분석」(2022) 등 21편이 있다.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